

古代 東아시아의 民族關係史에 대한 現代 中國의 社會主義的 理解*

西江大學校 史學科 教授 金 翰 奎

I.

‘古代’¹⁾ ‘東아시아 世界’²⁾는 많은 종류의 ‘民族’³⁾과 ‘國家’⁴⁾들로 구성되어

1) 現代 中國의 歷史學者들은 일반적으로 上古 이래 19世紀까지의 傳統時代를 모두 아울러 ‘古代’라고 칭한다. 본 主題의 성격상, 이러한 범주를 그대로 援用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평소에 筆者가 갖고있는 學問的 關心의 범주가 春秋戰國時代 이후 隋唐時代 까지 국한되어 있고 또한 이 시기를 時代區分論상 典型的인 ‘古代’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주로 이 시기를 論議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2) 顯在의 관점에서 본다면, ‘東아시아 世界’란 矛盾된 말이다. 그러나 傳統時代에 東아시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東아시아’가 곧 ‘世界’였다.

3) 現代 中國의 民族關係史家들은 예외없이 “民族이란 人間들이 歷史상에 형성한 共同言語, 共同地域, 共同經濟, 共同的 民族文化 特點상에 표현된 共同心理素質 등 4개 基本特徵을 가진 共同體”로 규정한 Stalin(〈民族問題와 Lenin主義〉)의 定義를 그대로 援用하고 있다. 本稿가 目的하는 것의 하나가 이들의 研究成果들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本稿에서의 ‘民族’概念 역시 일단 이러한 定義에 기초하고 있다.

4) 本稿에서의 ‘國家’개념이 현대적 의미의 國家概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文字 그대로의 ‘國家’, 즉 先秦時代의 ‘國家’概念과도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로 사용될 ‘國家’개념은 ‘독립된 主權과 領土를 보유한 전통적 형태의 王朝’을 주로 지칭하게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1991年度 教育部 社會主義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있었다. 수없이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동아시아 세계안에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한국과 중국, 일본,越南,蒙古 등 5개 국가가 공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점유하면서 56개나 되는 많은 민족을 포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영역은 과거 동아시아 세계의 輪廓과 近似하고 현재 중국의 諸 민족은 과거 동아시아 世界史를 형성한 거의 모든 민족들의 後孫들이다.

그러면 현재 중국 즉 中華人民共和國를 구성하는 諸 민족들의 祖上들은 모두 '中國人'이었는가? 이들이 형성한 역사는 '中國史'인가? 현재 중국의 疆域範圍는 과거에도 '中國'이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현대 中國民族關係史家들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學者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왜 現代中國의 民族關係史家들은 古代 東아시아世界史를 中國史로 이해하려 하는가? 그 理論의 根據는 무엇인가? 이러한 學問的 傾向의 背景과 意味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우리 學界에서는 이러한 疑問이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解答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古代 東아시아史에 대한 關心은 中國人史家들 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研究成果는 한국과 일본, 臺灣, 歐美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大量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中國'의 範疇를 과거 數千年 전까지 소급시킬 수 있다는 論議는 오직 현대 中國史學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 이는 현대 中國史學界가 처해있는 특수한 狀況을 反映하고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특수한 任務를 示唆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橋에서는 古代 東아시아 民族關係에 대한 現代中國史家들의 독특한 理解內容을 研究史的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現代中國史學界의 특수한 狀況과 役割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기본적인 問題點을 摘示함으로써, 古代 東아시아 民族關係史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端緒를 확보하고자 한다.

II.

1983년에 中國에서 발표된 한 論文⁵⁾은 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된 뒤 30여년간 中國史學界에서 진행된 中國民族關係史에 관한 광범위한 研究와 討論의 主題를 다음의 여섯가지 問題로 분류한 바 있다.

1. 疆域과 民族: 現在 中國 疆域內的 歷史上 古代民族은 中國의 民族인가, 아닌가? 그들이 건립한 國家는 中國의 一部인가, 外國인가?

2. 民族關係의 主流: 歷史上 各民族間의 戰爭을 어떻게 評價해야 하는가?

4. 民族英雄: 어떤 사람을 民族英雄이라 칭할 수 있는가?

5. 民族同化와 民族融合: 階級社會에서도 民族融合이 존재했는가?

6. 民族간의 “和親”: 역사상의 和親政策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또한 1984년 12월에 廣州에서 거행된 中國古代民族關係史學術討論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주요한 議題로 다루어졌음을 전하는 論文⁶⁾도 있다.

1. 民族戰爭과 民族政權: 我國 歷史上 民族關係史의 主流은 무엇인가? 民族戰爭의 概念을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 古代民族戰爭은 國內 兄弟간의 다툼인가, 國과 國의 싸움인가? 國內 民族戰爭의 性質을 논함에 있어 ‘侵略’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民族戰爭의 歷史作用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少數民族政權의 性質은 어떠한가? 民族鬭爭과 階級鬭爭의 관계는 어떠한가?

5) 劉先照, 〈我國民族關係史研究若干理論問題綜述〉《民族研究》1983年(第3期) 이 論文은 《歷史科學概論參考資料》(下冊)(葛懋春 項觀奇 編, 山東教育出版社, 1985)에 收錄되었는데, 지금부터 이 책은 《資料下》라 略稱한다.

6) 李晉槐 杜紹順, 〈中國古代民族關係史學術討論會綜述〉(《華南師範大學學報》社科版, 1985년 第2期). 이 論文은 朱紹侯 主編, 《中國古代民族關係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 1989)에 轉載되었는데, 이 책은 앞으로 《研究》로 略稱될 것임.

2. 民族英雄과 愛國主義: 民族英雄의 範疇를 여하히 確定할 것인가? 中華各民族의 共同利益을 代表하는 民族英雄이 역사상에 존재하였는가? 民族英雄의 類型은? ‘英雄이 英雄을 쳤다’는 問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民族英雄의 歷史地位를 여하히 評價할 것인가? 愛國主義의 내용과 民族英雄과의 關係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民族戰爭과 民族英雄, 愛國主義를 말할 때, 回避할 것이 있어야 하는가? 少數民族의 역사상 貢獻은 무엇인가?

3. 民族融合과 民族同化: 역사상 民族融合은 존재하였는가? 民族同化은 어떻게 區分되나? 改土歸流는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華夏族의 形成과 發展過程은 어떠하였나?

4. ‘統一的 多民族國家’라는 提法: “我國은 自古 이래로 一個統一的 多民族國家였다”는 表現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처럼 新中國이 출현한 이후에 전개된 民族關係史 研究과 討論이 이처럼 多岐한 問題들을 포괄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問題들이 “現在 中國 疆域上 古代民族은 모두 中國의 民族인가”라는 基本적 問題에서 派生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問題로 歸結되는 것도 사실이다. 즉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中國의 民族關係史研究은 오로지 이 問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中國 疆域내의 역사상 古代民族은 모두 中國의 민족인가”라는 基本主題에 관한 論議만을 정리해도 現代中國의 民族關係史研究의 主流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現在 中國의 疆域을 기준으로 歷史上 ‘中國’의 範疇를 劃定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1년 5월5일자 光明日報에 게재된 白壽彝의 〈論歷史上祖國國土問題的處理〉라는 論說에서였다. 이 글에서 白은 ‘本國’의 역사상 ‘祖國’의 ‘國土’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중의 하나는 ‘歷代 皇朝의 疆域으로 歷代 國土의 範圍를 삼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하면 “皇權統治의 範圍가 같지 않기 때문에 歷代

國土는 變更 혹은 伸縮하는 바가 있게 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現在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土로서 範圍를 삼는 방법’으로, “이를 上代로 遡及시켜 有史 이래로 이 土地위에서 이루어진 先民의 活動을 탐구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두가지 不同의 방법은 不同의 思想傾向을 표시한다고 주장했다. 白은 특히 前者의 방법이 傳統的 歷史觀點 즉 ‘皇朝歷史觀點’의 支配를 받은 것으로, 歷史研究가 ‘大漢族主義의 偏向’에 빠지도록 인도하게 되고, ‘本國史’를 일개 朝代와 일개 朝代로 孤立시켜 “歷史와 우리 現在의 社會生活이 결합되지 못하도록 인도”할 수 있지만, 後者는 낡은 종래의 ‘非人民的’ 혹은 ‘反人民的’ 立場에서 解放시키고, ‘本國史’를 ‘中華民族’ 共同的 歷史, 多民族 大家庭의 역사가 되게하며, 歷史研究를 통해 現在 社會生活의 意義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歷史上의 國土問題’를 처리함에 있어 前者는 錯誤的 方法이고 後者는 正確한 方法이라고 주장하였다.⁷⁾

白壽彝의 이와 같은 글은 실로 革命的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말대로 歷代 王朝의 疆域으로 ‘中國’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이 傳統的인 것이라면, 中華人民共和國의 疆域으로 役事的 ‘中國’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白의 주장은 傳統的 方法과 매우 相違한 것이다. 그 ‘差異’의 안에서 수없이 많은 民族들의 興亡盛衰가 이루어졌다.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이들 民族들이 ‘中國’의 바깥에 위치하였지만, 白의 새로운 관점에 의하면 이들 民族도 ‘中國人’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歷史上 ‘中國’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제출된 만큼, ‘傳統的 立場’에서 反論이 제기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白壽彝에 대한 反論은 ‘전통적 입장’에서 제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 즉 白이 제시한 ‘中國’의 範疇가 지나치게 좁다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1951年 5月 19日 字《光明日報》에 게재된 簫超然의 〈讀“論歷史上祖國

7) (中國)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上集(民族出版社, 北京, 1982) p. 208. 지금부터 이 책은 《論文集》으로 略稱함.

國土問題的處理”以後)에서 ‘新中國人民의 立場’과 ‘오늘날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土’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즉 ‘現在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土를 限界로 하여 中國史를 서술했을 경우’와 ‘新中國人民의 立場에서 中國史를 서술했을 경우’,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新中國人民’의 입장에서 中國史를 서술할 때는 반드시 中國境內 各種民族의 歷史를 包括해야 하는데, 蒙古族을 비롯한 中國境內의 각종 民族들의 歷史上 活動은 현재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土 위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또한 ‘新中國人民’의 입장에서 中國史를 서술하려면 마땅히 國外에서 英雄的인 활동을 전개한 역사상의 허다한 人物들을 描寫해야 하는데, 中國史의 범주를 현재의 國土로 제한하면 鄭和나 李如松, 孫文 등의 활동은 中國史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簫에 의하면, 亞洲 기타 各國에서 이루어진 ‘中國先民’의 活動과 中國 境內의 各種族 鬭爭의 역사를 中國史에 포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現 中華人民共和國 疆域위에서 진행된 ‘非中國先民’의 활동, 예컨대 近一百年來 中國에서 이루어진 帝國主義의 각종 侵掠 활동 같은 것도 마땅히 中國史에 포괄시켜야 한다.⁸⁾

일견 보아 白壽彝의 論旨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簫超然的 글은 사실은 白壽彝의 그것을 補完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白이 簫의 입장에 즉각 同意하고 謝意를 표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簫의 글 가운데 특히 주의할만한 것은 현재 中國의 疆域위에서 이뤄진 ‘非中國先民’의 활동까지 中國史의 범주에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에 의하면 帝國主義의 활동 외에도 簫가 구체적으로 例示하지는 않았으나 韓國이나 越南의 先民, 예컨대 高句麗나 夫餘 渤海 등의 역사도 中國史에 포함되어야 한다.

白壽彝에 贊同하는 두 번째의 글이 1959年 7月 5—日 《光明日報》에 게재되었다. 何茲全이 〈中國古代史教學中存在的一個問題〉라는 제목으로 쓴

8) 《論文集》 pp. 211-3.

이 論說에서는 자신과 中國史研究者들이 匈奴 契丹 蒙古 등의 歷史가 中國史임은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그 著作이나 敎學 中에서 이들이 ‘中國’을 ‘侵略(入)’했다고 하였음은 무의식중에 ‘漢族史’로써 中國史를 對替하는 과거 王朝史의 體系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自我批判이 진술되었다. 何는 歷史上 각 王朝가 항상 ‘中國’을 自稱하고 당시 王朝 이외의 사람들은 ‘蠻夷’라 칭하였으며, 正史의 史家들도 中國과 匈奴등을 對稱하여 ‘匈奴侵略中國’이라 하였음은 인정하였으나, 周 秦 漢 唐 등의 王朝만을 ‘中國’이라 칭하고 그 이외의 地區나 民族은 ‘外族’이라 한 傳統的 觀念은 錯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中國史’는 역사상 中國을 自稱한 각 王朝史 뿐만 아니라 당시 王朝에 屬하지 않은, 오늘날 中國의 각 民族人民과 地區의 역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漢族史로써, 혹은 王朝史로써 中國史를 代替하여 歷史上 당시 王朝에 所屬되지 않은 (그러나 지금은 中國의 疆域내에 포함되어 있는) 民族들의 당시 王朝에 대한 鬭爭을 外族과 中國의 鬭爭으로 보는 것은 錯誤라고 비판한 何茲全의 論旨 역시 白壽彝의 그것을 補完한 것이다. 현재 中華人民共和國의 疆域으로 中國史의 空間的 範疇를 삼아야 한다는 위 三者의 글들은 비록 짧은 論說文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후 中國에서 進행된 民族關係史研究의 움직일 수 없는 指標가 되었다.

‘현재 中國의 疆域을 中國史의 범위로 삼아야 한다’는 命題 위에서 民族關係史를 연구한 최초의 본격적인 論文은 1959년에 발표된 趙華富의 〈爲正確闡明我國歷史上的民族關係而鬭爭〉(山東大學學報 第1期)이다. 이 논문은 中國에서 ‘統一的 多民族國家’가 形成되는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漢族이 세운 王朝과 그 이외의 民族(혹은 그 國家)의 관계는 ‘中國國內’의 문제이지 ‘國外’의 문제가 아님을 論述하였다. 趙에 의하면, 漢族 封建主가 건립한 國家와 中國을 일치시키고 그 이외의 國家를 外國이라 하는 것은 少數民族이 세운 王朝는 ‘蕃邦’이라 하여 中國의 性分으로 보

9) 《論文集》 pp. 215-7.

지 않는 封建正統主義思想의 표현이자 漢族만이 中國人이고 漢族이 세운 國家만이 中國이라는 大漢族主義思想의 표현이다.¹⁰⁾ 그는 이외에도 民族關係의 主流問題, 民族戰爭과 民族壓迫問題, 少數民族 歷史發展에 대한 漢族의 作用과 中國역사발전에 대한 少數민족의 作用문제 등, 이후 民族關係史研究의 主要한 主題가 되는 問題들을 처음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趙華富의 학문적 貢獻은 무엇보다도 ‘현재 中國의 疆域으로 中國史의 범위를 劃定해야 한다’는 命題에 대하여 처음으로 理論的인 설명을 가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現在의 立場에서 보면 그렇지만, 당시의 立場에서 보면 그들 民族이 中國의 일부는 아니었고 그들 민족이 세운 短期王朝도 中國의 일부가 아니지 않았는가”라는 예상되는 批判을 상정하면서, 이는 ‘爲古而古’ ‘就古論古’의 錯誤라고 단정하였다. 趙에 의하면, 어떠한 시대의 역사를 연구할지라도 반드시 現在의 情況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實際에서 離脫하게 된다고 경계하였다. 즉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古代史研究態度는 ‘爲古而古’가 아니라 ‘古爲今用’의 태도로서, 이는 無產階級의 立場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觀點과 方法을 運用하는 것이라 하였다. 요컨대 “우리가 말하는 中國古代中世史란 오늘날 우리 中國의 古代와 中世史를 가리키는데, 오늘날 中國은 漢族 이외에도 50數個의 少數民族이 있기 때문에 中國 古代와 中世紀는 마땅히 이들 民族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論理는 西洋史學史에서 발전된 歷史的 認識의 한 傳統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妥當性 여부를 쉽게 論斷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대 中國의 民族關係史研究의 主流가 基礎하고 있는 理論의 根據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白壽彝의 命題는 趙華富 이후 수많은 大家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承認되었다. 現代中國의 代表적 古代史家인 剪伯贊은 1960년에 執筆한 〈關於處理中國史上的民族關係問題〉¹²⁾에서 ‘中國史上 民族의 國籍問題’에 論及

10) 《論文集》 pp.34-6.

11) 《論文集》 p.36.

12) 《中央民族學院學報》1979年 第1-2期에서 발표.

하면서, '征服'되어 漢族王朝의 統治範圍 안으로 納入된 民族만을 '中國人'으로 간주하는 立場을 비판하고, 역사상의 少數民族이 邊方地區에서 건립한 王朝 혹은 汗國을 일률적으로 '地方政權' 혹은 '地方性王國'이라稱하는 반면 中原地區의 王朝는 '皇朝'라 칭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¹³⁾ 한편 1962년 6월 20일자 《天津日報》에 게재된 周乾藻의 〈我國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問題〉에서도 일정한 歷史時期에서는 漢과 唐이 '中國'이라면 匈奴와 突厥은 '外國'임이 분명하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匈奴와 突厥은 '國內民族'이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¹⁴⁾ 1962년에 《歷史教學》(9期)에 발표된 岑家梧의 〈在教學上如何處理祖國歷史上的民族關係〉에서도 역사상 疆域과 민족의 '內'와 '外'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오늘날 中國 版圖이내의 각 민족은 역사상 모두 國內民族이므로 '外族' '四夷' '內' '外' 등은 漢族을 正統으로 하는 觀念이고 《史記》《通鑑》의 입장은 歷史主義의 歪曲이므로 반드시 마르크스-레닌 主義의 觀點에 의거하여 '使古爲今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岑은 漢 唐 宋 등이 '外國'(中亞各國과 日本 等)에 대하여 '中國'을 '代表'할 수는 있으나(주위의 各族人民도 中國을 구성하는 成分이었으므로) '中國'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다소 이색적인 견해도 피력하였다.¹⁵⁾ 저명한 역사가 呂振羽도 《學術月刊》(1963年 第1期)에 발표한 〈中國役事上民族關係的幾個問題〉를 통해 이 論議에 참여하였다. 그는 北魏와 遼 金 등의 朝代나 政權이 성립되기 전이나 滅亡한 뒤에도 鮮卑 契丹 女真 等族이 모두 '中國國內'에 있었지 '國外'에 있지 않았으며 中國境內에 일정 기간 並存한 '國'이나 政權은 모두 서로 고정된 國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南北朝와 宋遼 明清 등의 戰爭은 모두 國內戰爭이요 壓迫과 被壓迫의 民族戰爭이기 때문에 侵略과 反侵略의 前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첨가하였다.¹⁶⁾

13) 《論文集》 pp. 121-2.

14) 《論文集》 pp. 72-3.

15) 《論文集》 p. 80.

16) 《論文集》 p. 91-8.

이처럼 民族關係史에 관심을 갖고있던 거의 모든 中國人學者들이 白壽彝가 제시한 命題에 贊同을 표시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모든 이가 현재의 中華人民共和國의 疆域과 歷史上 中國의 範疇를 일치시켰던 것은 아니다. 놀라웁게도 단 한 사람 孫祚民만이 이러한 命題에 異議를 제기하였다. 1961년 11월 4일자 《文匯報》에 게재된 孫祚民은 ‘祖國’疆域과 역사상 少數民族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歷代 皇朝의 疆域으로써 歷代 國土의 범위를 삼아 不同한 皇朝統治範圍에 따라 역대 國土도 變更 伸縮한다고 보는 방법과 현재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土를 범위로 하여 有史 이래 이 土地위에서 이뤄진 각 少數民族의 활동을 포괄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後者は 科學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부하였다. 그는 後者가 역사시기에 每 王朝의 疆域이 변화하였음을 부인하여 현재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하나의 ‘틀’로써 과거의 모든 역사시기의 不同한 王朝과 國家의 疆域을 고정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孫祚民은 어떠한 國家와 民族도 永遠不變한 ‘定型’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역사상의 少數民族은 대부분 漢王朝의 國境 바깥에 있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漢族과 融合 統一되어 統一的 多民族國家를 이루었음을 상기시켰다. 물론 孫도 ‘中國史는 현재 中華人民共和國疆域을 범위로 한다(즉 國境線內的 各族人民의 역사가 모두 中國史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同意하지만, 中國이 통일적 多民族國家가 되기 이전에는 匈奴 突厥 등 少數民族들이 獨立的 民族國家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當時 中國의 漢唐 등 王朝의 입장에서 보면 外族이요 外國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음을 강조했다. 즉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各族 人民의 역사가 모두 中國史의 범위에 들지만, 각 時代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적 外族이요 外國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孫祚民에 의하면 歷史發展의 時間觀念을 모호하게하고 역사상의 ‘當時’와 현재의 ‘今日’을 혼동하는 것은 명백한 錯誤다. 따라서 漢唐 등 王朝과 匈奴 突厥 등 민족의 對立과 戰爭을 國內性으로 간주하여 侵略 개념을 제거하고 侵略戰의 非正義性和

英雄의 鬭爭傳統까지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外族이 侵入하여 民族矛盾이 尖銳化할때 漢族의 王朝가 ‘中國을 代表’하고 祖國의 象徵이 될 수 있으므로 ‘漢族’ 혹은 ‘王朝’가 ‘中國을 代替’할 수 있다. 요컨대, 中國 古代史중의 ‘祖國’疆域과 少數民族問題를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歷史的’態度和 ‘辨證的’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孫祚民의 기본 입장이다.¹⁷⁾

孫祚民의 反論이 제기됨에 따라 ‘歷史上 中國의 範疇’를 確定하는 문제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이 兩立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論爭의 모양이 갖추어진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論議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1962년 8월 2일자 《文匯報》에 孫의 〈再論中國古代史中有關祖國疆域和少數民族問題的錯誤觀點〉이 《史學月刊》(2期)에 발표된 뒤부터 1977년에 이르기까지 民族關係史에 관한 단 한편의 글도 발표되지 않았다. ‘역사상 中國의 범주’문제는 1979년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만큼, 14년간의 시간적 空白이 있었던 것이다. 이 14년간의 철저한 沈默은 文化革命과 ‘四人幫’의 極左의 환경속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學問도 窒息할 수 밖에 없었음을 전해준다. 특히 民族關係史와 같이 現實에 매우 예민한 分野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시기의 특수한 상황, 특히 民族關係史研究分野가 처해진 특수한 環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後人이 전하는 다음과 같은 傳言으로 짐작할 수만 있을 뿐이다.

“科學性和 革命性을 結合하여 歷史를 서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政治를 위한 服務란 결코 ‘四人幫’이 한 것처럼 거짓을 지어내어 歷史를 毀造하는 反科學的 反革命的 ‘爲政治服務’가 아니라 科學과 政治를 정확히 結合하는 것이다.”¹⁸⁾

“建國前期의 中國民族關係史 研究는 健康하고 活氣가 넘쳤으나, 十年內亂 기간에는 엄중한 妨害와 破壞를 만나 한동안 沈默한 禁區가 만들어

17) 《論文集》 pp. 218-223.

18) 白壽彝, 〈關於中國民族關係史上的幾個問題〉(《北京師範大學學報》1981年 第6期) p. 199.

졌다. 江青의 反革命集團을 粉碎한 뒤, 특히 11屆3中全會 이래로 黨의 ‘雙百’方針이 철저히 관철 집행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도 다시 活氣를 되찾아 열렬한 討論을 전개하고 유익한 見解가 제출되어 새로운 進展이 이루어졌다… ‘自古以來就是說과 그 有關論点的 錯誤는 極左思潮의 妨害影響과 우리 마르크스主義理論 水準의 限界 등에 기인하지만… 특히 十年內亂期間에 마침내 ‘權威性’의 定論을 이루어 深信者로 하여금 假를 眞이라 하게 하고 不信者로 하여금 그 假를 말하기를 꺼리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任意로 歷史를 改造하였다… 11屆3中全會 이래로 黨의 實事求是 思想路線이 회복되고 研究作業이 점차 깊어짐에 따라 ‘自古以來就是說’과 그 有關論点的 錯誤에 대해서도 많은 同志들이 계속 지적하게 되었다. 특히 1981년의 ‘中國民族關係史座談會’에서 進一步하였다…”¹⁹⁾

“과거 우리의 民族關係史研究方面에 존재한 問題는 ‘古爲今用’의 方針을 관철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黨의 民族政策을 위해 服務한다는 原則을 관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左’의 影響을 받아 이른바 ‘民族問題는 사실상 階級問題’라는 ‘左’의 觀點으로 복잡한 民族關係史를 研究 闡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十年動亂중에 이러한 ‘左’의 觀點이 발전하여 民族問題를 階級問題와 동일시하고 民族問題의 존재를 부인하며 黨의 民族政策과 黨의 民族工作을 取消하기에 이르렀다.”²⁰⁾

요컨대 後人에 의해 ‘十年動亂’이라 규탄받은 文化革命과 四人幫執權期間에는 모든 종류의 학문적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民族關係史研究도 예외가 아니었다. 관계되는 글이 간혹 발표되었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狀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어서 ‘學問的 眞實’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建國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民族關係史研究는 文化革命에 이르러 사실상 終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950년 이후 1965년까지 전개된 民族關係史論爭은 어떻게 評價할 수 있을까.

19) 《研究》 pp. 29-35.

20) 蔡仲淑, 〈學習黨的民族政策高好民族關係史研究〉(《研究》) p. 11.

中華人民共和國의 建國 이후 文化大革命에 이르는 期間에 中國學界에서 進행된 民族關係史研究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中國의 歷史’와 ‘歷史上의 中國’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라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現在 中華人民共和國의 疆域으로써 역사상 中國의 範疇를 劃定해야 한다’와 ‘歷代 王朝의 疆域으로써 역사상 中國의 範疇로 삼아야 한다’는 서로 相反되는 두개의 命題가 제기되었다. 이와 아울러 ‘古爲今用’과 ‘就古論古’ (혹은 ‘爲古而古’)라는 두가지의 相反된 理論的 根據가 제시되었다. 前者가 現在의 立場에서 歷史를 해석하려는 태도라고 한다면, 後者는 當時의 立場에서 歷史를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前者가 新中國 建設 이후에 당면한 民族矛盾과 階級矛盾 등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意圖에서 제시된 것이라면, 後者는 中國의 傳統的 歷史認識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前者는 後者側에 의해 非科學的인 ‘左’의 傾向이라 비판되고, 後者는 前者側에 의해 ‘大漢族主義的 地方民族主義的 傳統的 正統史觀’에 의해 지배된 사고 방식이라고 매도되었다. 그러나 이들 兩者의 立場은 현실적 목적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歷史를 이해하는 두가지 가능한 방법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 妥當性이 간단하게 論斷될 수는 없다. 그러나 ‘歷史上 中國의 範疇’를 劃定하려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中國’概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철저히 생략한, 兩者에 공통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中國’概念, 즉 역사상 當時의 사람들이 어떠한 範疇를 ‘中國’으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古爲今用’의 입장이나 ‘就古論古’의 입장이거나, 그 어느 경우일지라도 결코 看過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생략된 것은 文化革命 이전의 民族關係史研究가 매우 초보적인 단계, 즉 問題의 提起 段階에서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III.

文化革命과 四人幫時代가 克服된 11屆3中全會를 계기로, 中國에서의 民族關係史研究가 活氣를 되찾았다. '역사상 中國'과 '中國의 역사'의 일치여부에 대한 논쟁도 재계되었다. 학문적 환경이 개선되어 이른바 '禁區'가 깨뜨려졌다. 理念보다는 史實이 강조되는 이른바 '實事求是'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文化革命 이전에는 철저하게 생략되었던 역사적 '中國'概念에 대한 구체적 分析을 통한 自說의 補完이 시도되었다. 집단적인 論爭의 場이 마련되어 研究成果의 組織의 蓄積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文化革命 이후의 民族關係史研究는 이전의 그것과 相違한 측면이 많이 엿보이기 때문에 章을 달리하여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歴史的 中國範疇'에 관한 論爭의 꺼진 불을 다시 붙여 活氣를 되찾게 한 글은 馬壽千의 〈民族關係與歷史劇〉(《中央民族學院學報》1979年 第1-2期)이었다. 이 글에서 馬는 '邊疆地區의 少數民族은 外國인가 中國인가, 內部の 구별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옛 論議를 다시 정리 소개하면서, '오늘날 國境내 각 民族의 역사는 中國歷史의 일부이고 少數民族과 漢族의 관계는 國內民族之間의 관계이며 兩者가 세운 王朝의 관계는 國內 政權 王朝간의 관계'라는 白壽彝 계열의 입장을 지지하였다.²¹⁾ 說得力을 얻기 위하여 馬는 몇가지 새로운 論據를 제시하였다. 첫째, 邊疆地區에서 出土되는 遺物을 통해 그곳이 自古以來로 中國의 土地였음이 입증된다. 둘째, 역사상 少數民族을 中國人으로 보지 않은 것이 당시의 正統說法이라고 하나 바로 그 正統說法이 歷史事實에 위반되는 錯誤이다. 셋째, 현재의 少數民族에게 "너희는 현재 中國人이지만 너희의 祖上은 中國人이 아니라 外國人이었고 너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은 역사상으로는 中國의 토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접수하겠는가.²²⁾

21) 孫祥民, 〈開創中國民族關係史研究的新局面〉《研究》p. 29.

22) 《論文集》p. 261.

그러나 이러한 證據들보다 더 강력하게 馬壽千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極左의 克服이라는 狀況 그 자체였다. 馬는 四人幫이 횡행할 때 史學에도 영향을 미쳐 古代 北方의 匈奴族이 漢代에 ‘北方一霸’를 이루어 漢에 대해 ‘突然襲擊’했다고 하여 ‘黨의 民族工作’을 크게 파괴하고 少數民族의 音樂과 舞蹈 등을 ‘異國情調’라 하여 少數민족 群衆과 民族幹部들로부터 강렬한 反感을 불러 일어섰음을 지적했다.²³⁾ 이 말은 곧 四人幫時代의 過誤를 씻고 民族團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中國을 구성하는 모든 民族의 祖上들이 과거에도 함께 中國人이었음을 학문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民族團結이 절실히 요구되는 狀況하에서 學問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의 하나는 中國의 統一性を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따라서 1979년에 재개된 民族關係史研究에서 새로 추가된 命題의 하나는 ‘中國은 일찍부터 統一的 多民族關係史研究에서 새로 추가된 命題의 하나는 ‘中國은 일찍부터 統一的 多民族國家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命題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中國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역사적으로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杜榮坤과 白翠琴은 〈試論古代少數民族政權與祖國的關係〉(《民族研究》1979年 1期)에서 먼저 ‘中國은 일찍부터 統一的 多民族國家’였음을 전제한 다음, 古代의 民族政權들이 모두 建號 稱尊하고 스스로 ‘中外’라 자처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僭僞’라 하면서 中國의 統一을 자任하였음을 거론하였다.²⁴⁾ 陳連開도 〈怎樣闡明中國自古是多民族國家〉(《歷史教學》1979年 2期)에서 ‘中國은 秦漢 이래 統一的 多民族國家를 형성했고 統一이 發展의 主流이었다’고 전제하고, 匈奴 五胡十六國 北魏 등 封建王朝나 地方性政權을 세운 민족들은 建號 이전에 이미 朝貢과 冊封 등을 통해 多民族 中國의 一員이 되어 있었고 王朝를 세운 뒤에는 中國 統一을 自己任務로 自任하였음을 논증하면서 後趙 石勒의 ‘中國皇帝’自

23) 中央民族學院民族研究論叢編委會, 《民族理論和民族政策論文選:1951-1983》(中央民族學院出版社, 北京, 1986) pp. 400-1. 이 책은 앞으로 《論文選》으로 略稱될 것임.

24) 《論文集》p. 403.

稱, 西域 黑韃諸汗의 ‘中國之君’ 自認등을 그 예로 적시하였다.²⁵⁾ 陳永齡도 〈我國是各國人民共同締造的統一的多民族國家〉(《歷史教學》1979年 4期)에서 毛澤東의 “我國은 自古以來 多數民族이 결합하여 이룬, 大人口를 擁有的한 一個 國家”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中國은 일개 統一의 多民族國家로 世界에 존재해 왔으며 統一은 中國歷史 발전의 主流요 本質이었음’을 설명하려 하였다.²⁶⁾ 郭沫若 呂振羽 등과 함께 初期의 古代史研究을 이끌어 온 范文瀾도 그의 遺稿 〈中國歷史上的民族鬭爭與融合〉(《歷史研究》1980年 1期)에서 秦漢 이후 中國은 기본상 統一의 國家이었고 割據分裂은 暫時的 現象이었을 뿐이었다고 하면서 非華夏族과 華夏族이 融合하여 새로운 華夏族을 형성해 나간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려 하였다.²⁷⁾ 이외에도 楊志玖²⁸⁾ 등 다수의 學者들이 ‘我國은 自古以來 一個 多民族國家였다’는 또하나의 새로운 命題를 계승하여, 역사적 事像을 통해 입증하려 하였다.

그러나 역사상 少數民族과 漢族이 오래 전부터 ‘統一의 多民族國家’를 이루었음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現在의 ‘中國’과 과거의 ‘中國’이 實際에 있어서는 일치될 수 없다는 孫祚民의 命題는 여전히 有効하였다. 즉 역사상 ‘中國’의 범위를 現在의 ‘中國’의 疆域을 기준으로 劃定해야 한다는 白壽彝系列의 주장은 역사상 中國의 범위를 논하면서도 當時의 ‘中國’概念을 無視한다는 弱點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1979년부터 再開된 論議에서는 ‘統一의 多民族國家’論을 전개함과 동시에, 소략하게나마 역사적 ‘中國’概念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첨가되었다.

‘中國’이란 말을 하나의 歷史的 概念으로 간주하여 ‘不斷히 發展變化하는 含義’를 검토하려한 최초의 노력은 杜榮坤과 白翠琴의 前揭論文이었다. 이들 兩人은 ‘中國’이란 말이 가장 일찍 발견되는 《詩》《書》에서는

25) 《論文集》 pp. 224-6.

26) 《論文集》 pp. 243-44.

27) 《論文集》 pp. 249-51.

28) 《論文集》 pp. 143-151.

‘都城’ ‘國中’ ‘王畿’등을 뜻하였으나 西周와 春秋戰國時代에는 ‘宗周’와 ‘詩書禮樂法度爲政’의 ‘山東諸侯齊魏之大國’을 가리켰으며 漢唐時期 이후 清代前期까지는 ‘中原地區’ 혹은 ‘中央王朝’를 의미한, 일종의 文化類型과 政治地位의 區分 혹은 일개 地域의 名稱이었지 전체 歷史範疇와 政治管轄範圍를 가리키는 概念은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三代 이후 明清代에 이르기 까지 歷代王朝가 모두 자기의 國號를 갖고 있었을 뿐 어떤 王朝도 ‘中國’을 國號로 삼지 않았으며, ‘中國’이란 말이 정식으로 일개 國家政權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 孫文이 창건한 ‘中華民國’(通稱中國)이 처음이었음도 지적했다.²⁹⁾

杜와 白이 發展 變化한 역사적 ‘中國’개념의 含義를 지적한 까닭은 현재의 ‘中國’과 과거의 ‘中國’이 달랐음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中國’개념의 의미가 당시의 ‘歷史實際’와 相違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中國’개념으로써는 역사적 ‘中國’의 범주를 확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中華民國’의 ‘中華’가 ‘我國境內의 兄弟民族’을 포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漢 滿 蒙 回 藏의 ‘五族共和’만을 제창하였고 蔣介石時代에는 少數民族을 漢族의 ‘宗族’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中國共產黨과 毛澤東이 영도한 中國革命이 성공한 뒤 ‘中華民族’이 진정으로 ‘我國의 古代民族과 오늘날 50數個 民族의 總稱’이 되어 서야 비로서 ‘中國’이란 말은 民族主義와 正統觀念의 束縛에서 진정으로 벗어나 ‘中華人民共和國의 簡稱’이 되었고 ‘中國의 歷史實際를 반영하는 하나의 科學的 概念’이 되었다. 따라서 역사상 某個 地域의 명칭 혹은 某種 文化類型과 政治地位를 반영하는 ‘中國’이란 말으로써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多民族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中國을 解釋하고 代替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³⁰⁾

楊建新도 이와 똑같은 논리로써 역사적 ‘中國’概念을 통해 역사적 ‘中

29) 〈從 ‘四郎探母’ 談到我國歷史上的民族關係〉(《天津日報》1980년 2월 12일)

30) 《論文集》 pp. 227-8.

國'의 範疇을 확정하는 방법을 거부하였다. 그는 〈歷史上中國의疆域問題〉(《中俄關係史論文集》, 甘肅人民出版社, 1979)라는 論文에서 杜와 白의 그것과 흡사한 '中國'개념의 分析結果를 제시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中國'이란 말의 뜻으로써 古代文獻中の '中國'을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中國歷史上 模 統治集團의 疆域範疇나 某種 文化類型만을 반영하는 '中國'이란 말로써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多民族 中國을 해석하고 대체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³¹⁾

그러나 '現代 中國=歷史上 中國'을 고집한다고 해서 반드시 '歷史上 中國概念=歷史上 中國'의 방법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陳連開와 같은 이는 오히려 역사상 '中國'개념을 통해 자신의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는 前揭論文에서, 殷周時代에는 '中國'概念이 統治中心地區를 가리키고 春秋時代에는 華夏諸侯 즉 '諸夏'를 가리켰지만, 실제로는 華夷가 함께 '中國'에 포함되었고 秦漢 統一 이후에는 '中國'이 全國 各族人民共同的 祖國이 되었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는 '오늘의 中國은 歷史的 中國의 일개 發展'이라고 한 毛澤東의 말을 基本命題로 하여, 역사적 中國은 점차 形成 發展 鞏固한 하나의 統一多民族國家라 규정하였다.³²⁾ 陳의 논의는 지나치게 소략하고 論據가 취약하지만, 역사적 '中國'概念을 통해 역사상의 中國을 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進展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陳은 〈論中國歷史上的疆域與民族〉(《中央民族學院學報》1981年 4期)이라는 論文에서, 초기의 '中國'概念은 中原 邊裔의 對稱的 地理概念이었지만 晚明清初의 中國文獻에서는 西方各國에 대하여 '中國'을 自稱하는 것이 발견되고 耶蘇會士들이 中國을 '中國' 혹은 '中華帝國(簡稱中國)'이라 稱한 경우도 발견됨을 지적했다. 그의 검색에 의하면, 특히 1689년에 체결된 尼布楚條約에서 '大清'이란 國號대신에 '中國'이란 呼稱을 사용하고 少數民族이 세운 黑韃汗國이 '中

31) 《論文集》p. 228.

32) 《論文集》pp. 265-7.

國之君'을 自認하였으며 '桃花石(拓跋氏)' 'kitai(契丹)' 등이 中國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역사적 '中國'개념도 현재의 '中國'개념과 相違하지 않다. 그러나 陳은 1840년에 西方 資本主義 列強이 中國을 침입하여 國土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中國古代史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中華人民共和國의 疆域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1840년 이전의 疆域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³³⁾

또한 같은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이라 하더라도 인제, 어떻게 統一的 多民族國家가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역사적 '中國'의 범위문제를 처리하는 입장에 融通性이 부여될 수도 있다. 예컨대, 王玉哲 같은 이는 〈中國統一的 多民族國家形成的時代問題〉(《南開大學學報》1980年 2期)에서 현재의 統一的 多民族國家는 秦漢時期에 形成된 것이 아니라 夏商 이래로 諸民族의 人民이 長期的인 經濟 文化關係를 經유하여 不同한 國家와 不同한 時期에 不同한 方式으로 잇따라 結合하여 共同創建하였기 때문에, 中國 歷代 各개 統一的 多民族王朝 혹은 國家는 그 疆域範圍와 그 包有民族이 각각 같지 않고 현재의 國家와는 더욱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³⁴⁾

이처럼 1979년 이후에 再開된 '中國'範圍에 관한 論議는 1965년 이전까지 展開된 종래의 論議보다는 다소 柔然한 方向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界圍氣에 鼓舞된 孫祚民이 20여년만에 그 특유의 주장을 다시 내놓았다. 특히 그의 勇氣를 북돋아 준 것은 范文瀾의 前揭 遺稿였다. 孫은 "搾取階級이 통치하는 民族과 國家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和平共處'나 '平等聯合'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敵對的 民族이나 國家가 통상적으로 잔혹한 戰爭을 進行하면 敵對民族 혹은 敵國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范文瀾의 말에 힘입어, 1980년에 발표한 〈處理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重要準則-讀范文瀾 '中國歷史上的民族鬭爭與融合'-〉(《歷史研究》5期)에서, '我國은自古이래 하나의 統一的 多民族國家였고 漢族과 허다한 兄弟

33) 《論文集》 pp. 239-41.

34) 《論文集》 pp. 359-72.

民族들이 모두 하나의 民族大家庭의 成員이 되었으니 漢族王朝의 통치하에 있지 않거나 스스로 獨立政權 혹은 國家를 세워 漢族王朝과 並存한 民族이나 國家를 外族이나 敵國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하여 맹렬한 反擊을 가하였다. 孫은 오늘날 中華人民共和國의 領土로써 역사상 歷代疆域問題를 처리하자는 입장은 역사상의 '當時'와 당대의 '今日'이라는 絶對不同的 時間概念을 混同한 결과로서, 外族 外國인가의 여부는 當時의 實際狀況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기준에 의하면, 아직 統一的 多民族國家를 완성하기 이전 단계의 독립적 民族國家(例: 匈奴)를 民族大家庭의 한 成分으로 볼 수 없다. 당시에 이미 漢族王朝의 版圖에 融合 歸入되었으면 '國內'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外族 外國이다. 현재의 中國내에 있다고 해서 당시 獨立主權國家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다.³⁵⁾

范文瀾의 권위에 의지하여 再起하려한 孫祚民에 대하여 '統一的 多民族國家'論側에서 즉각 反論을 제기하였다. 먼저 金石은 〈這決不是處理歷史上 民族關係的準則——與孫祚民同志商量〉(《中央民族學院學報》1981年 2期)을 통해, 孫祚民이 자신의 論旨를 위해 范文瀾의 글을 曲解하였다고 비판한 다음, 역사적 '國'概念의 分析을 통해, 孫, 國內敵對의 民族 혹은 '國家'와 外族 혹은 外國의 개념을 混同하고 있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그는 焦循이 《周禮正義》大宰疏에서 "天下의 입장에서 보면 每一封이 一國이고, 一國의 입장에서 보면 郊內가 國이고 郊外는 野이며, 郊內의 입장에서 보면 城內가 國이고 城外는 野이다"라고 한 註釋에 의거, 역사상 '國'과 '國'의 관계는 '中國'과 '外國'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논증하려 하였고 華夏와 四夷의 관계도 區別이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하려 하였다.³⁶⁾ 陳梧桐도 〈關於處理我國民族關係史若干原則的商量〉(《中央民族學院學報》1981年 2期)에서, 각개 民族이 건립한 國家政權은 모두 자기가 中國의

35) 《論文集》 pp. 274-5.

36) 《論文集》 pp. 152-8.

合法政權이라 하여 스스로 中國의 바깥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泰漢 이후 二千年間 封建王朝의 交替와 상관없이 統治民族의 變換과 관계없이 中國은 시종 多民族國家로 존재해 왔음이 ‘당시의 實際情況’이었다고 주장했다.³⁷⁾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論爭의 雙方이 모두 역사적 事實에 근거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孫祚民은 ‘中國은自古以來 統一的 多民族國家였다’는 命題는 歷史的 事實에 근거하지 않은 ‘反科學的 提法’이라 비판하였다. 그러나 金石도 華夷를 구별하는 것은 ‘自古 이래로 中國의 多民族이 共同으로 祖國歷史를 創造하고 祖國疆域을 開拓한 史實’에 違反되고 民族으로써 國界를 나누는 理論은 中國의 實情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으며, 陳梧桐도 古代民族關係의 處理는 ‘我國이自古以來로 多民族國家였다’는 ‘歷史事實’과 中國領土위에 漢族이 건립한 王朝을 일치시키는 孫祚民의 觀點은 ‘我國이自古以來 多民族國家였다’는 歷史事實에 違背되며 科學的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論爭의 雙方이 歷史的 事實을 강조하는 것은 60년대초까지의 논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論爭에서 理念的 要素와 現實的 考慮가 완전히 除去되었던 것은 아니다. 金石은 ‘엄격한 時間觀念상의 歷史事實을 建立해야 한다’는 孫祚民의 주장을 宣傳한다면 그 結果가 民族團結에 어떠한 影響을 주겠는가 라고 反問하면서, 만약 平等的 原則을 적용하여 漢族과 各族을 모두 中國歷史上 不可分割의 成員으로 본다면 民族關係에 관한 意見의 分歧가 통일될 것이지만, 中國을 漢人之國으로 보고 各族을 모두 外國 外族으로 보는 民族偏見이 있는 한 意見分歧는 통일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金은 ‘內’와 ‘外’를 구분하는 歷史分界線은 愛國과 賣國, 侵略과 反侵略을 구분하는 分水嶺이기도 한다면서, 中國政府가 일관되게 ‘中國의 少數民族居住地는 종래 모두 中國 神聖領土의 不

37) 《論文選》 pp. 388-395.

可分離的 組織部分이고 中國古代的 民族鬭爭은 순수히 中國의 內部問題임을 인식'해 왔기 때문에 歷史研究에서도 반드시 이 準則을 준수해야 各族人民의 團結을 增強하고 全體國家와 民族의 利益을 擁護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孫祚民은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이 '歷史研究를 無產階級政治에 服務시키고 民族의 友好團結을 增進시키려는 良好한 意圖'를 갖고 있지만 그 '結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孫에 의하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하에서만 '民族大家庭'이 실현될 수 있는데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은 이를 封建 奴隸社會에 까지 적용시켜 社會主義 民族政策의 優越性을 貶低시켰으며, 民族英雄과 醜類의 존재를 부인하여 兩者의 한계를 소멸시켰다. 그 역시 과거의 苦痛을 回憶하고 '黨의 英明한 民族政策'에 感激케 하기 위해서도 마르크시스트 歷史學의 革命性과 科學性을 統一시키기를 희망했다. 이와 같이 1979년부터 다시 불붙은 中國範圍論爭은 歷史的 事實의 強調라는 새로운 進展이 더하여 졌으나 理念的 要素의 殘在와 現實의 問題의 考慮로 인해 여전히 많은 限界를 갖고 있었다.

70년대말부터 재개된 民族關係史 연구는 엄청난 活氣를 갖고 많은 성과들을 생산하였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3차례에 걸친 全國規模의 學術討論會였다. 제1차는 1981년 5월에 北京에서 개최된 中國民族關係史聯句學術座談會였고, 제2차는 1984년 12월에 廣州에서 열린 中國古代民族關係史學術討論會였으며, 제3차는 1985년 10월에 廈門에서 열린 中國民族史學會首屆學術討論會였다. 이들 대규모 學術討論會를 主導한 翁獨健은 세차례의 會議를 통해 民族關係史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一致된 認識을 얻게되었다고 주장했다. 첫째, 中國民族關係史研究는 반드시 마르크스主義理論을 指導로 삼아 民族平等의 原則을 堅持하여, 平等의 態度로써 不平等한 民族關係를 연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大漢族主義와 封建正統思想의 流毒을 깨끗이 씻음과 동시에 狹隘한 民族感情이 연구를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中國民族關係史研究는 반드시

秦漢 이래로 我國이 統一的 多民族國家였다는 歷史를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歷史上 民族關係發展의 主流는 各民族間의 相互吸水, 相互依存, 漸次的 接近을 통해 中華民族 特有의 強大的 內聚力이 形成되어, 各 民族人民이 公동으로 統一多民族의 偉대한 祖國을 創建 發展시켰다는 것으로, 이것이 역사발전의 本質이다. 세째, 中國民族關係史에 대한 理論性問題認識이 날로 接近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扎实的 資料收集과 整理, 부단한 研究課題의 개발 등을 통해 우리의 연구가 공허한 概念상의 抽象的 論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³⁸⁾

翁獨健이 지적한 ‘비교적 一致된 認識’이란 것이 자신의 개인적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³⁹⁾이지만, 建國 이래의 오랜 論議와 80년대의 전국적 討論會 등을 통해 中國學界에 어느 정도 공통된 認識이란 것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李晋槐 杜紹順의 前掲論文에 의하면, 廣州會議에서도 다수의 學者들이 ‘中國의 歷史’와 ‘歷史上 中國’을 일치시키려 노력하였다. 예컨대, 張煉은 이 命題가 歷史實際에 符合하고 民族의 願意를 반영하며 오늘날 民族團結의 要求에도 부합된다고 하였다. 練銘志는 ‘中國’이 역사상 統一된 時間은 分裂의 時間에 비해 훨씬 더 길었고 統一과 分裂,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統一로 발전함으로서 分裂은 否定의 否定인 中間環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分裂時期에도 中國의 版圖가 分離된 적이 없었으며 分裂은 ‘對立的 統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陳連開는 ‘我國自古以來’란 통일적 多民族國家가 형성되어 가는 하나의 歷史過程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은 秦漢時代부터 形成되기 시작하여 唐宋時代에 進一步 形成되고 元 明 清代에 이르러 정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⁴⁰⁾

38) 《論文集》 pp. 168-74.

39) 《研究》 pp. 1-2.

40) 翁獨健이 北京 座談會에서 발표한 〈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問題〉(《中央民族學院學報》1981年 4期)와 廣州會議에서 발표한 〈再談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問題〉(《民族研究》1985年 3期)에서, “역사상의 中國과 역대 封建王朝 혹은 漢族王朝과 일치시킬

그러나 ‘中國은 自古 이래로 統一的 多民族國家였다’는 命題가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墨守될 수는 없다. 廣州會議에서는 이러한 命題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咸者는 이 命題의 부분적 修正을 요구하였고 咸者는 이 命題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孫祚民의 주장에 贊同하기도 하였는데, 그 數가 적지 않았다고 李晉槐 등은 전하고 있다. 修正論者들은 주로 ‘統一的’이라는 3자가 中國古代史의 發展課程을 概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少數民族이 건립한 政權들을 모두 包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3자를 제거하자고 요구했다. 예컨대, 田繼周는 國家的 統一은 일개 國家가 일개 政權의 控制과 統治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中國 역사상 상당히 긴 期間이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吳量愷도 統一이란 直接統治를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만약 每 시기에 統一을 強調하게 되면 허다한 民族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는 翁獨健 조차도 廣州會議의 閉幕式에서 행한 發言에서 이 命題가 그렇게 科學的이지 못함을 인정하고 ‘我國은 自古 이래로 多民族國家였다’고 하는 것이 비교적 합당하다고 하였다고 한다.⁴¹⁾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을 반대하는 孫祚民의 입장은 廣州會議에서도 확고히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 발전하였다. 그는 〈關於開創中國民族關係史研究新局面的思考〉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民族關係史研究 가운데서 나타나는 分歧와 昏亂의 원인이 民族理論에 관한 마르크스主義의 基本 原理로 부터의 離脫, 구체적으로는 ‘自古以來說’의 依據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 命題가 建國初期에 祖國統一을 維護하고 民族團結을 強化하기 위해서 提出되었기 때문에 그 願望은 良好하지만, 中國史研究對象의 空間範圍와 歷史上 中國疆域範圍라는 두개 不同性質의 問題

수 없다… 匈奴가 漢族과 融合한 秦漢時期 부터 統一的 多民族國家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我國의 역사는 各族人民이 共同創建한 것이므로 各族人民의 歷史는 역사상의 地位나 情況, 中原王朝에의 歸屬與否와 관계없이 모두 中國歷史의 組成部分이다…” 등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41) 《研究》 p. 374.

를 混同하였기 때문에 그 方法과 結論은 모두 명백히 錯誤의이라 하였다. 그는 오늘날 中華人民共和國의 疆域으로 역사상 各民族國家關係를 처리한다면 반드시 황당한 結論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면서, “역사상 外來侵略은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兄弟간의 집안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라든가 “劉邦과 昌頤이 ‘約爲昆弟’하였기 때문에 ‘兄死妻嫂’의 관습에 따라 昌頤이 呂后에게 請婚하였다” 혹은 “符堅이 일으킨 戰爭은 ‘濟民水災’의 議舉였다”는 주장 등 그 事例를 낱낱이 열거하였다. 그는 이같은 錯誤가 極左思潮의 영향과 마르크스 理論水準의 限界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는 마르크스 主義의 基本原理를 指導로 堅持함으로써 ‘선량한 願望’으로 어떠한 ‘政治需要’를 핑계삼지 않고, 實事求是의 원칙을 굳게 지켜 歷史事實을 엄격히 존중함으로써 史實을 임의로 無視 曲解하여 某種의 ‘需要’에 적응하지 않으며, 科學的 方法을 엄격히 준수하고 唯物辨證法的 方法을 포괄함으로써 동일한 時間, 동일한 方面, 동일한 事物을 사유할 때는 동일한 概念으로써 그것을 反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孫祚民은 事實을 증시했다. 그에 의하면, 歷史는 既往의 事實이다. 歷史研究는 반드시 事實을 기초로 해야한다. 事實이 없으면 歷史도 없다. 孫의 입장은 西域이 ‘外國’이라 칭해졌다는 事實, 匈奴人 金日石單이 ‘外國人’을 自稱했다는 事實, 後漢 이후에야 匈奴가 中國의 일부가 되었다는 事實, 吐蕃과 唐이 ‘敵國之禮’를 취하고 ‘世界를 劃定했다’는 事實, 正史 ‘外國傳’에 記載된 朝鮮과 日本 등이 지금은 中國의 疆域밖에 있다는 事實 등에 입각하고 있다. 그는 民族關係의 變質과 民族간의 不和를 막고 愛國主義 敎育을 위해 이러한 ‘事實’을 의도적으로 ‘回避’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하여, 이는 歷史研究의 革命性과 科學性에 위배된다고 적극 배척했다.⁴³⁾

實事求是를 통해 ‘自古 이래로 統一的 多民族國家였다’는 命題를 비판한

42) 《研究》 p. 373.

43) 《研究》 pp. 29-38.

孫祚民의 입장은 廣州會議을 계기로 複數의 支持者를 얻게 되었다. 孫祚民의 觀點을 贊同하고 나선 王佩瓊은 현재의 統一的 多民族國家는 小에서 大로 점차 형성되어온 것이지 결코 ‘自古以來’로 存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약 ‘自古以來說’을 취하면 中國版圖 變動의 事實과 民族間의 戰爭을 屢하고 中國 역사상 千餘年의 分裂과 不統一의 局面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中原 中心의 ‘內聚力’에 의한 것이 아니라 鐵과 血의 征服史가 反復된 결과였다고 反駁했다. 歐陽熙도 孫祚民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同意함을 밝히면서, ‘自古以來說’은 성립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觀點을 취하게 되면 매우 많은 問題들이 解決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⁴⁴⁾

이처럼 孫祚民系의 攻勢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白壽彝系의 對應도 역시 강화되었다. 白壽彝 자신이 오랫동안 北京座談會에 등장하여, 〈關於中國民族關係史上的幾個問題〉(《北京師範大學報》1981年 6期)라는 論文을 통해, 中國史는 中華人民共和國 各民族의 歷史이고 오늘날 中國境內의 各民族은 基本상 과거에도 ‘中國의 民族’이었다는 자신의 命題를 再確認함과 동시에, 邊境 少數民族의 祖先과 內地 民族의 祖先은 兄弟關係요 親戚關係였다는가, 匈奴와 突厥 등이 원래 활동한 곳은 中國의 地方이었다는 등 歷史的 接近을 통해 이 命題를 입증하려 시도하였다.⁴⁵⁾ 이는 初期의 白壽彝系의 주장이 ‘어떠한 역사연구도 현재의 상황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古爲今用’의 理念的 立場 위에서 開陣되었던 것과는 달리, 80년대에 들어와서는 白壽彝系에서도 ‘歷史的 事實’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廣州會議에서 발표된 白壽彝系의 論文들 가운데도 역사적 史實을 중시한 정교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張海鵬의 〈論‘中國’-我國古代民族關係史研究之一〉이었다. 이 論文에서는 歷史的 ‘中國’

44) 《研究》 pp. 361-73.

45) 《論文集》 pp. 181-5.

概念을 狹義의 ‘中國’과 廣義의 ‘中國’으로 나누고, 前者는 華夏族이 聚居한 中原地區로서 ‘中國’과 聚居地까지 모두 포함하는 ‘大中國’ 개념이라 하면서, 특히 後者는 ‘天下’ 혹은 ‘四夷’와 대칭하는 개념이었으나 後者는 中原을 중심으로 ‘四夷’의 聚居地까지 모두 포함하는 ‘大中國’ 개념이라 하면서, 특히 後者는 ‘天下’ 개념의 代稱이었던 만큼 ‘四夷’를 포함한 ‘天下’가 모두 ‘中國’에 포괄되었으며 ‘我國’ 역사상의 各民族은 모두 ‘大中國’內的 成員이었으므로, 邊境의 少數民族을 ‘中國’의 바깥에 두려는 주장은 ‘歷史的 事實’과 符合되지 않는다는 論旨가 개진되었다. 또한 張은 역사적 ‘中國’ 개념이 周代에는 ‘京師’를 가리켰으나 秦漢 이후에는 ‘王朝’의 泛稱으로 사용되었고 明清代부터는 國家의 專稱이 되었음을 논증하였다.⁴⁶⁾ 張이 말하는 협의의 ‘中國’이란 禹貢의 ‘九州’를 가리키고 광의의 ‘中國’이란 축연의 ‘大九州’를 두고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概念分析은 논리적 타당성에 異議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개념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白壽彝의 命題를 입증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廣州會議에서 나타난 이같은 특징은 8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陳連開의 〈中國 哇夷 蕃漢 中華 中華民族—一個內在聯系展被認識的課程—〉은 歷史的 事實을 증시하는 80년대의 이러한 傾向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論文이다. 이 論文에서 陳은 역사적 ‘中國’ 개념을 분석하여, 西周時代에는 ‘京師’ ‘中原’ ‘夏族’ 등을 의미하였으나 戰國時代에 이르러 中國과 西夷의 ‘五方之民’이 모두 ‘天下’를 이루어 ‘西海’에 同居한다는 統一體觀念이 형성하였고 秦漢 이후에는 ‘內地’뿐만 아니라 全中國 소유의 民族地區를 모두 포함하게 되었으며, 東晉十六國南北朝時代에 ‘中華’ ‘蕃’ ‘漢人’ 개념이 派生되어 나옴과 동시에 ‘中國’은 各民族 共有的 명칭이 되었다고 하면서, 오늘날의 中國은 中華民族의 多元性和 一體性的 辨證法的 統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⁴⁷⁾ 이 論文의 방법과 논

46) 《研究》 pp. 51-8.

47) 賈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中央民族學院出版社, 北京, 1989) pp. 77-104.

리는 張害鵬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80년대 民族關係史研究의 일반적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80년대 民族關係史家들에 공통된 경향, 즉 역사적 事實을 중시하는 경향은 이른바 ‘實事求是’라 흔히 일컬어지는데, 이는 理念을 중시하던 70년대 이전의 경향과 對比되는 것이다. 특히 80년대의 民族關係史家들은 60년대 後半과 70년대의 極左의 雰圍氣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理念을 중시하는 태도를 ‘左’의 傾向이라 하여 批判하는 자세가 일반화되었다. 孫祚民이 上揭論文에서, ‘短時間내에 集中的으로 廣範圍하게 出現한 左의 傾向’에 대하여 극렬히 비판⁴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白壽彝조차도 上揭論文에서 四人幫時代의 ‘反科學的 反革命的’인 ‘爲政治服務’를 비판하면서 史實을 중시하는 ‘優良한 史學傳統’의 ‘史德’에 새로운 意義를 부여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⁴⁹⁾ 마르크스主義가 民族問題를 처리하는 ‘民族平等’의 원칙을 現在뿐만 아니라 歷史에 까지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朱紹侯도 〈如何認識和處理中國歷史上的民族和民族關係〉에서 各族人民의 불유쾌한 기억을 피하기 위해 民族戰爭을 말하지 말고 友好往來만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일종의 ‘左’의 偏見이고 實事求是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⁵⁰⁾ 또한 民族關係研究過程에 大民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를 선양하고 民族分裂主義를 고취하여 民族差別의 觀點을 散布하는 것은 黨의 民族政策에 위배되고 歷史科學의 ‘事實’과도 위배된다고 비판한 蔡仲淑 역시, 〈學習黨的民族政策高好民族關係史研究〉에서 民族關係史研究중의 ‘左’의 影響을 肅清할 것을 회망했다. 그는 中國民族關係史研究는 반드시 實際에서 출발하여 ‘實事求是의 辨證唯物主義와 歷史唯物主義의 思想路線’을 堅持하여 歷史의 本來面目을 제시하고, 역사상의 偏見을 극복하고 歷史事實을 解明하여 진정한 科學의 한 분야를 이루어 합당한 作用을 받

48) 《研究》p. 31.

49) 《論文集》p. 199.

50) 《研究》p. 23.

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¹⁾ 물론 80년대의 民族關係史研究에서도 ‘古爲今用’의 이념적 논리나 黨의 民族政策 및 民族工作과 四化現代化에 이바지하는 등 이른바 ‘爲政治服務’의 경향이 완전히 消去된 것은 아니지만, ‘實事求是’ 즉 史實을 중시하는 경향이 현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지금까지 우리는 新中國이 건설된 뒤부터 지금까지 中國의 民族關係史 學界에서 축적해온 주요한 研究成果들을 ‘歷史上 中國의 範疇’에 관한 論爭을 중심으로 整理하였다. 비록 大多數와 極少數의 다름이었지만, 이 論爭은 ‘현재의 中國疆域으로 역사상 中國의 範疇를 劃定해야 한다’와 ‘歷代 王朝의 疆域을 역사상 中國의 범주로 삼아야 한다’는 相反된, 그러나 對等한 가치를 갖는 두가지의 命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논쟁은 현대 中國의 史學界가 안고있는 가장 심각한 두가지 問題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學問에 대한 理念의 支配라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政治’에 대한 學問의 奉仕라는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理念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가리키고 政治가 民族團結을 통한 民族問題의 解消를 의미함은 물론이다. 논쟁의 一方은 理念의 지도에 따라 현실의 ‘政治에 服務하기 위해’ 설정되었고, 당연히 대다수의 學者들이 이 입장에 서 있었다. 논쟁의 또다른 一方은 學問으로 하여금 理念의 支配에서 벗어나고 ‘爲政治服務’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며, 여기에는 極少數의 學者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後者 즉 孫祚民系도 ‘마르크스主義의 基本原理’를 云云하고 ‘歷史研究의 科學性과 革命性’을 지론하기도 했지만, 이는 위의 두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露呈되었던 ‘十年動亂’ 즉 그 혹독한 文化革命과 四人

51) 《研究》p. 11.

幫時代가 끝난 뒤까지도 자신의 命題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둘러친 外皮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中國에서의 民族關係史研究過程은 대체로 3段階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問題提起의 단계로서, 中華人民共和國이 建國되었을 때부터 文化革命이 일어났을 때까지의 15여년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위의 두 命題가 모두 제기되어 論爭이 성립되기만 하였을 뿐, 역사적 事實의 확인을 통한 구체적 論證의 과정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研究와 論爭이 사실상 中斷되었던 단계로서, 文化革命이 일어난 뒤부터 四人幫이 沒落할 때까지의 15여년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極左的 理念이 學問世界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民族關係史分野의 연구성과가 거의 축적되지 못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두 命題에 대한 구체적인 論證段階로서, 11屆3中全會 이후 지금까지의 15여년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혁명 이전의 活氣가 회복되어 ‘歷史上 中國의 範疇’에 관한 論爭이 再開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問題에서 派生되어 나온 民族關係史에 관한 수다한 主題들이 論爭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전국적 규모의 討論會가 개최되어 연구성과의 조직적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번째 단계에서 과시된 학문적 活力이 현실적 狀況의 轉換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번째 단계에서 극명하게 노정된 문제점, 즉 學問이 理念에 지배되고 政治에 服務한다는 問題가 狀況의 好轉에 힘입어 크게 緩和됨으로서, 역사상 ‘中國’概念과 같은 史實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11屆3中全會 이후에 기울어진 實證的 노력에도 뚜렷한 限界가 있었다. 비록 적지않은 學者들이 ‘中國’概念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다투어 노력하였지만 극히 제한된 資料만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疏略함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모든 노력이 이미 文化革命이전에 제기되었던 두개의 命題를 立證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 두가지의 命題는 긴 期間의 論爭을 통해 이미 그 결정적 缺陷이 노출되었었

다. '현재 中國의 疆域으로 역사상 中國의 범주를 확정해야 한다'는 命題는 時間的 變化에 따른 狀況의 變化를 無視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歷代 王朝의 疆域을 역사상 中國의 범주로 삼아야 한다'는 命題는 漢族 중심의 傳統的 正統史觀의 고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같은 命題들을 계속 고집하는 한, 그것을 입증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명확한 限界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前者를 前提하면 '歷史上 世界'에 관한 觀念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後者를 고집하면 '歷史上 中國'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예컨대, 前者에 의하면 '自古' 이래로 '역사상의 世界'에는 오직 '中國'이라는 一國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世界 概念 즉 '天下'나 '四海' '四方'概念 등과 역사상 '中國'概念의 相關關係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世界에 一國만이 존재했다면 唯一無二한 '帝國'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을터인데, '帝國'의 疆域을 그대로 계승한 中華人民共和國는 '中華人民帝國'임을 自認하는가. 만약 역사상(東아시아) 世界에 一國만이 존재했다면, 2천년 이상이나 실질적 역할을 지속해온 萬里長城의 존재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 後者의 命題를 고집해온 孫祚民系도 역사적 事實을 강조하면서도, 한번도 歷代 王朝의 疆域이 역사상 '中國'概念과 일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었다. 만약 兩者가 각자의 命題에 얽매이지 않고 광범위한 資料의 정리를 통해 歷史的 '中國'概念을 분석하였다면, 그것이 時代와 狀況의 변화에 따라 혹은 '中心城邑國家'를, 혹은 '中原地區'를, 혹은 '漢族王朝' 혹은 '中原國家'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華夷'를 포함한 '天下' 즉 洞아시아 世界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다.⁵²⁾

또한 역사적 '中國'概念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

52) 金翰奎, 〈'中國'概念을 통해서 본 古代中國人의 世界觀〉(《全宗宗教授華甲紀念論叢》, 1979):同著《古代中國的世界秩序》(一潮閣, 서울, 1981)에서 古代의 諸 文獻에 보이는 '中國'概念을 統計學的 方法으로 分析 處理하였으나, 여기서는 상세한 論及을 생략한다.

는 ‘中國’이란 말이 ‘中華民國’ 혹은 ‘中華人民共和國’의 簡稱 혹은 略稱일 뿐, 歷史的 ‘中國’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論文은 1章에서도 밝혔듯이, 古代 東아시아의 民族關係史에 관한 現代中國에서의 研究成果를 소개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筆者의 主觀的 所見을 배제하고 客觀的 입장에서 정리하려 하였다. 筆者 자신도 70년대말과 80년대초에 이 主題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中國學界의 成果들과 접촉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번의 정리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의 하나는 現代 中國史學界에서 이루어져온 일련의 民族關係史研究過程이 韓國이나 日本 臺灣 등 隣國의 史學界와 철저하게 단절된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歷史學이 蓄積的 學問의 한 분야임을 감안한다면, 특히 ‘歷史上 東아시아 世界’에 공동의 관심을 갖고있는 各國에서의 研究成果가 조직적으로 통합 축적되는 일이 긴요하다고 하겠다.